

# “여수박람회·무안 한중산단 최대한 지원”

한나라당 여수서 ‘민생탐방’ 스타트

전남도, F1 지원법 처리 등 현안 사업 건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후 야당의 거센 반격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이 27일 ‘민생 정체’를 선언하고 민생탐방에 본격 나섰다.

민주당의 ‘100일 정부’에 맞서 민생과 서민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이자 미디어법의 후폭풍을 차단하겠다는 노림수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주제도 단연 민생과 서민이었다.

박희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업체에 아스팔트에서 선동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제 민생의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밝혀졌다.

한나라당은 민생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지역경제 살리기’ 현장 점검에 나섰다.

허태열·박재순 최고위원과 김성조 정책위원장, 심재철 국회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정책위 및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첫 민생탐방으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준비 현장을 방문했다.

한나라당은 현장점검 후 여수세계

박람회 조직위와 전라남도 및 여수시 등과 ‘당·정·지자체 합동간담회’를 갖고 여수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폭 지원하는 동시에 전라남도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당 지도부는 여수 방문에 이어 광주를 찾아 ‘광주·전남 주요당직자 간담회’를 갖고 지역 숙원사업 및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29일에는 충북 음성의 혁신도시 추진현장을 점검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남도·여수시 등과 여수시청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허태열 최고위원은 “F1 지원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됐어야 했는데 국회 사정 때문에 그렇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재순 최고위원은 “9월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시키겠다. 민생법안 하나로 분류해서라도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조 정책위원장은 “2012 여수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강동석 위원장이 27일 오후 여수시 덕충동 인근 여수엑스포 준비 현장에서 허태열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여수엑스포 준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수엑스포 마스코트 ‘여니·수니’

스토리텔링 공모 수상작 발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7일 박람회 공식마스코트인 ‘여니·수니’ 탄생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공모전 결과 총 68개의 응모작 중 ‘Go! 2012 여니와 수니의 시간여행’(서인미 작품)제1위와 생명의 구슬’(심수진 작품)이 공동 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또 공동 우수상 2편 외에 ▲세 가지 보물(김태곤) ▲여행(문미영) ▲갈매기들의 눈물과 꿈이 나온 여니와 수니 탄생 이야기(윤유석) ▲당신을 초대합니다(김세진·김세정) 등 4편을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들에게

계는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여니·수니’의 애니메이션 또는 만화제작 줄거리로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여수 세계박람회 마스코트 ‘여니·수니’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박람회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생명의 근원인 ‘플랑크톤’을 모티브로 바다의 아름다운 빛깔을 머리의 컬러에 담았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 중의 하나인 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간 여수 신항만 일대에서 열린다. /최권일기자 cki@

“책임 행정” 박광태 광주시장 전결권 대폭 위임

박광태 광주시장이 고위 간부들에게 결재권을 대폭 위임하는 등 책임 행정 강화에 나섰다.

박 시장은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정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시장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시장 및 실·국장 이하 간부공무원들의 전결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국제 교류·대외 문제와 외교 ▲국내외 투자유치 ▲국비확보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의 정사항 등을 제외한 업무는 사무전결

성 등 주요 핵심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항 활주로를 2.8km에서 3.2km로 확장해 줄 것과 여수공항 활주로와 계류장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의 국고 지원도 건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위임 심의를 거쳐 간부 공무원들이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또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영자금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관련 실무에 주문했다.

/윤영기자 penfoot@

“배수로 확장 등 근본적 개선책 마련해야”

박준영 지사 침수피해 대책 지시

고 주문했다.

박 지사는 이어 “강이나 소하천 및 배수로 등의 다리를 건설할 때 다리 주변 수로 폭이 좁아지거나 교각이 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침수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다리 건설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다리 주변 수로 폭을 넓히고, 교각도 유선형으로 하

는 등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

고 지적했다.

또 “이번 호우피해로 개선 복구해야 할 지방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 전액을 도 예산으로 지원해 시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면서도 항구적인 공사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최권일기자 cki@

## 아옹산 수치 여사 마지막 재판

선고는 2~3주 뒤 나올 듯

택연금 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미안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옹산 수치 여사에 대한 마지막 재판이 27일 (이하 혐지시간) 열렸다.

수치 여사는 미국인 남성 존 예토가 지난 5월초 자택에 잠입한 사건과 관련, 택연금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양군 내 감옥내 특별재판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치 여사는 지난 24일 열린 재판에서 이미 최후 진술을 마쳤으며 이 날 속개된 재판에서는 예토와 수치 여사의 두 하녀에 이어 검찰측이 최후 진술을 했다.

예토는 지난 5월3일 양군 대학로의

호수변에 있는 수치 여사의 자택에 헤엄쳐서 잠입, 이를 동안 머문 뒤 떠나오다 체포됐으며 예토는 법정에서 수치 여사가 암살되는 꿈을 꾼 뒤 이를 수치 여사에게 알리기 위해 자택에 들어갔다고 주장해왔다.

수치 여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니안 윈은 “수치 여사에 대한 선고는 2~3주 뒤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20여년 동안 14년 가량을 구금 상태로 지내온 수치 여사는 이번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 사회는 그동안 미안마 군정이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수치 여사가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연합뉴스

## ‘조깅 중 출도’ 사르코지 건강 회복

을 잊지는 않았다고 성명은 덧붙였다.

병원 의료진들은 이날 뇌출혈 사고로 대통령에게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을 권유했으며 이에 따라 27~28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연기 또는 취소됐다고 엘리제궁이 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27일 기업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지원 약정식에 참석하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경제장관으로 하여금 행사를 주재하도록 했으며, 28일 몽상 미셀 수도원 방문일정은 연기했다.

하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은 29일에는 당초 예정대로 엘리제궁에서 각료 회의를 열어 상반기 주요 국정과제를 처리한 뒤 다음 21일까지 여름휴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 정부, 北 개인·기업 금융제재 가동

정부가 북한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따라 5명의 북한 인사와 5개

북한 기업 및 기관에 대한 금융 및 관련 제재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재 대상 북한 인사는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간부,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황석하 원자력 총국 간부, 리홍섭 전 영변 원자력 연구소 소장, 한

유로 조선용약산총무부회사 간부다. 제재 대상 기업 및 기관은 남천강 무역, 조선 원자력 총국, 홍콩 일래트로닉스, 조선혁신 무역회사, 조선 단군 무역회사다.

이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거나 핵확산 금융거래 및 WMD(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대북 제재 대상에 북한 정부 인사들이 포함됐다. /연합뉴스